

말 많고 탈 많은 광주 아파트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 고품·브랜드업체 시공사 도용 등 잇단 잡음 탈·불법 난립시민 피해 우려...“사업 초기 적극적 행정 개입” 지적

광주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고품을 뿌렸다든 내용의 고소가 접수되는가 하면 시공사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유명 브랜드 업체가 시공사에 선정된 것처럼 표를 무단 사용하거나 홍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시민들의 재산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들은 정상적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광주북부경찰과 광주시 북부 풍향 구역 재개발조합측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포스코건설 측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고품을 들린 정황 등 10여 건이 있다며 북부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합측은 포스코건설 측 직원들이 총회 2일 전 현금 100만~230만원 상당 또는 고기로 바꿀 수 있는 수십만 원권의 정육상 품권, 의류 등을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금품전달 사실을) 알리면 큰일 난다”는 내용이 담긴 전화통화 녹취와 돈 봉투를 주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 의류 구매 영수증 등의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닌 조합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경찰 고소 접수증을 분쟁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락”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우선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소인 신분으로 포스코건설 측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고소장 제출 사건은 현 조합 임원진과 시공사간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측에서 현 조합장

등 임원진을 교체하려하자, 조합측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조합 측은 일단 오는 26일 포스코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을 안건으로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추후 다른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광주시 광산구 한 주택조합은 시공사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사 측은 주택조합 측이 시공계약 체결까지 상표나 건설사 이름을 조합원 모집 광고에 쓰지 않기로 한 양해각서 내용을 어겼으며, 약속 위반을 이유로 지난 달 27일 광산구 지역주택조합에 양해각서 해제를 통보했다.

동구에서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 중인 모 지역주택조합이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포스코건설의 상표를 내걸고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건설사 측은 심각한 상표 무단사용이라고 판단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광주 곳곳에서 포스코가 지역주택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다”며 “조합 가입을 결정할 때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파트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을 도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포스코측이 지난 2004년 봉선동에 건설한 아파트의 높은 인기 때문이다.

주택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선 재개발 조합측이 시공사 선정부터 모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기는 힘들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재개발 사업이 시비와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데, 지자체



아이들이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10일 광주 북구청로버에서 열린 '나만의 트리'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북구청 직원과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가 손을 놓고 있어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지자체가 재발 사업 자체를 컨트롤하기 힘들겠지만, 조

합원 모집·시공사 선정 등 진행 과정에서 불법적 자문 등을 통해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0~30대 청년들 모여 5·18 논한다

오늘 '미래세대가 5·18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 2차 포럼

5·18민주화운동을 겪어보지 못한 광주 지역 10~30대 청년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5·18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10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11일 오후 7시부터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미래세대가 5·18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 II'를 주제로 제4차 5·18광주정신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80년 이후 태어난 젊은 청년들이 5·18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간접적 경험과 활동,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 미래세대에 오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프로젝트 면담'의 이단비·

조수현 씨, '광주청년센터the숲'의 문정은 씨, '광주오월을 기억해주세요' 페이스 북 운영자 김동규 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지킴이 '주먹밥'의 이수민 씨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본인들의 활동을 토대로 5·18에 대한 생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록관 관계자는 “내년에 40주년을 맞는 5·18의 오월 정신이 후세에 전승되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5·18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5·18이 40주년을 넘어 광주의 오월 정신이 영원히 계승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치 편향 논란' 문제 출제 고교...결국 한문 재시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한문 문제로 출제해 논란이 일었던 여수의 한 고등학교가 10일 재시험을 치렀다.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수의 모 고교 2학년 학생들은 이날 오전 한문 기말고사를 치렀다.

이 학교 한문 교사는 최근 기말고사 시험에서 '조국의 제자 금태섭 언행 불일치'라는 신문 기사를 예문으로 제시하고 조 장관 후보자가 금 의원에 대한 심정을 나타낸 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정답은 '배은망덕'(背德忘德)이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이름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도 출제했다.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사회적으로 물의

를 일으킨 정유라와 민중을 개돼지로 표현해 논란이 된 고위공무원의 SNS 글을 예시로 주고 '사립이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쓰라고 했다. 해당 문제는 인터넷 게시물 등에 퍼지면서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교사들로 구성된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로부터 출제 의증을 듣는 등 조사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점 등 문제의 적정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치른 것”이라며 “학생들도 별다른 동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유도·처벌 강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더 좋은 체류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단속된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고용주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본격화

광주지법 순천지원 증인신문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재판이 시작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 중법정에서 여순사건 재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열린 4차 공판준

비기일에서 검찰이 철도기관사였던 고(故) 장환봉(당시 29세) 씨의 공소사실을 특정한 뒤 이날 정식 심리가 시작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법원이 정식 심리 시작 전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과 쟁점 등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날 재판에서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에서 근무했던 승무원과 사형선고를 받고 감형됐던 다른 승무원의 유족, 여순재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병섭 씨, 진실화해

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김춘수 박사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심을 청구한 장씨의 딸 장경자(74)씨도 법정에서 증인들이 경험했거나 조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당시 계엄군의 발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김 박사는 “적법하지 않았다. 일본의 계엄령을 적용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않았다”면서 “군법회의와 같은 재판을 거치거나 다른 형태의 처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조사를 마친 뒤 내년 1월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집행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 집행된 점 등을 이유로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지난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광양시 대대적 홍보한 1000만원짜리 케어로봇 '제 값 못한다'



○...광양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노인 요양원 등에 보급했다고 언론에 집중홍보했던 1000만 원짜리 '케어로봇'이 제 값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

○...10일 광양시와 백성호 광양시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광양시 노인 요양원 9곳과 재가 복지시설 등에 보급된 배설 케어 로봇 64대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이동식 비

데기로 전락하거나 일부 기계는 아예 쓰지 않고 있는 것

○...백 의원은 “환자들이 배설 케어 로봇 착용시 불편을 호소하고, 누수도 잦아 아예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어르신은 피부가 짓무르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광양시 관계자는 “완벽한 배설 케어는 아니지만, 비데 기능을 활용하면서 로봇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